

# 영국 노동시장의 회복과 탈불황 시대의 이슈

하세정 (영국 LSE 경제지리학 박사과정)

## ■ 머리말

미국발 신용경색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유럽에 상륙한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영국이다. 비슷한 시기에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프랑스가 2009년 여름에 공식적으로 불황을 빠져나온 것에 비해 반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야 영국은 비슷한 단계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금융발 경기불황이었던 탓에 금융이 주요 산업인 영국이 더욱 큰 타격을 받았고, 개인들이 주택 소유를 선호하고, 정책적으로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집값 하락도 서민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했다. 마침내, 2010년 접어들면서 영국의 회복세가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경기와 노동시장이 모두 바닥을 찍고, 약하게나마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중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들도 발표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회복의 징조와 앞으로의 회복 전망, 불황이 영국 노동시장에 남긴 상처와 피해, 던져준 과제 등을 통해 탈불황기의 영국 노동시장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 ■ 영국 노동시장의 회복세와 전망

새해 들어 영국 언론 등은 조심스럽게 회복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했다. 불황이 시작된 2008년

여름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업자가 감소했다. 2009년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자 수가 7,000명 감소한 246만 명을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7.9%에서 0.1% 줄어들었다. 2009년 12월 실업급여 신청자 역시 한 달 전에 비해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500명을 크게 초과한 1만 5,200명이 줄어 161만 명을 기록했고, 16~24세의 청년실업자도 94만 3,000명에서 92만 7,000명으로 감소했다. 대표적인 노동통계치들이 노동시장의 회복세를 지지하고 있음이 나타난 것이다. 깜짝 회복세에 대해 정부도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예상을 벗어난 결과와 미미한 하락폭 때문에 당분간은 안심할 수 없다는 눈치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회복이 실업 관련 통계에서 읽혀지는 것만큼 희망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시간제 근로자 수는 9만 9,000명이 증가해 199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인 771만 명을 기록했다. 이 중 100만 명 이상이 전일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간제를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1.2%로 2007년 8월 이래로 가장 높았다. 예전과 달리 취업의 대안으로 상위 학교 진학도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11월까지 3개월간 비경제활동인구가 7만 9,000명 늘었는데 이는 대부분 8만 1,000여 명 증가한 학생들과 3만 4,000여 명 증가한 조기퇴직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실업 외의 상태를 선택함으로써 공식적인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기에 앞서 최저점을 통과해 성장률 하강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노동시장의 회복을 뒷받침할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느리지만 회복세가 느껴진다. 2008년 2/4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은 -2.5%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 1/4분기를 정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9년 마지막 3개월간의 경제성장률이 0.1%을 기록하며, 1955년 통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었던 6분기 동안의 불황이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하지만, 마지막 분기 성장률은 전문가들이 전망한 0.4%에 못 미쳐 아직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이다. 각종 경제 단체들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회복에 대한 조심스런 희망이나 자신감이 느껴진다. 영국 상공회의소(BCC)는 2009년 4/4분기 경제 조사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음을 근거로, 영국 경제가 불황기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기업측 납부금 인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심리의 회복도 느껴진다. 영국 소매 콘소시

업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낀 12월 판매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경제총(CBI)은 불황 이전 수준의 성장률 회복은 2012년까지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회복세가 느껴지는 소비와 달리 영국 경제는 여전히 정부 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 부문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 부채가 GDP의 7%에 달하는 등 정부로서는 지출 확대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재정적자가 누적된 그리스로 인해 유로존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적자 및 지출 감소에 대한 외부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모처럼의 회복기를 맞고 있는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불황의 피해

불황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008년 2/4분기부터 2009년 11월까지 실업자 수는 84만 7,000명 증가한 246만 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5.2%에서 7.8%로 경총 뛰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2% 이상 감소한 72.5%를 기록했다. 현재는 실업 증가세가 완전히 꺾이고, 하락세 내지는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9년 초만 해도 실업자 수가 최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서 보듯이 246만 명을 정점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위기 동안 노동시장에 대한 총평으로 이전 위기나 경쟁국에 비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1980~1990년대의 경제불황 동안 고용률 감소 폭이 2.9~3.9%였던 반면 현재는 2.2%에 그쳤고, 실업률 역시 G7, EU, OECD 가입국의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황의 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 대응력도 크게 신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전 불황기 동안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10% 이상 증가했으나 이번에는 절반 이하 수준인 5.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진 듯싶다. 겉보기에는 과거와 예상보다 작은 상처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본 전문가들은 보기보다 상처가 깊다고 평가한다. 공인 인사개발연구소(CIPD)가 펴낸 '근로 감사 (Work Audit)' 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불황기 동안 약 131만 명의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해, 순취업인구 하락을 두 배 가량 앞섰다고 밝혔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 근로인구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새로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건수가 620만 건으로 같은 기간 실업급여 신청자(claimant count)의 증가를 7.5배나 앞섰다. 즉 일부 개인들의 경우 반복적인 실업을 겪었다는 반증이다. 보고서는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상용직 일자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또한, 정리해고당한 근로자의 3분의 2가 새 직장을 찾았을 때, 전 직장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삭감 폭은 평균 28%를 기록했다.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인 존 필콧 박사는 원래 우려했던 수준과 경기불황의 여파에 비해 실업의 규모가 작았지만, 정리해고나 반복적인 실업과 임금삭감은 광범위하게 경험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리해고가 해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인들에게도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킨 점을 고려할 때, 금번의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을 정부가 주장하듯 단순히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번의 위기는 영국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긴 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는 산업별·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로 위기에 의한 피해 정도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불황의 위기가 처음 감지되었을 때, 영국 언론들은 금융위기인 만큼 금융계의 일자리 손실이 가장 크고,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무려 8.5%의 일자리가 감소한 제조업 근로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나타났고, 환란의 근원지로 지탄 받은 금융권은 이의 절반에 못 미치는 3.8%의 일자리만이 사라졌다. 2008년 2/4분기부터 1년간 블루칼라 근로자들은 기술 수준에 따라 -4.5%에서 -5.3% 정도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증감폭은 -2.4%에서 +3.6%로 오히려 일자리 수가 늘어난 직업군도 있었다. 불황기에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쉽게 해고되는 것이 경우가 일반이어서 여성들의 고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남성들의 고용률 인하폭이 3%로 여성의 0.8%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 근로자 수를 크게 앞지르는 시간제 일자리와 공공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감소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시간제 근로자는 1.7% 늘어난 반면, 전일제 근로는 2.3%로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이른 연령대인 16~17세의 경우 고용률이 무려 22% 감소했고, 고졸 또는 대졸 취업자들이 대부분인 18~24세에서도 고용률이 5.5%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25~49세 근로자들은 고용률이 1.4% 내려갔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오히려 1.3% 증가하는 등 청소년층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청년층 실업자를 집중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18~24세 사이의 청년 실업자 중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한해 일자리나 직업교육을 보장했으나, 현재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켜, 조기에 청년층의 장기실업화를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계층 중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황의 가장 큰 피해자로 나타났다. 2008년 7월부터 1년간 실업률에서 단순노무직의 경우 3.6% 증가한 12.7%를 기록한 반면, 전문직은 1.2% 증가해 2.3%를 나타냈다. 실업급여 신청도 비유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 의해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사무직 종사자의 37%, 공장 근로자의 30%, 창고업 근로자의 20%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반면, 고소득 직종인 금융이나 고위 사무직, 법률직의 경우 1% 정도만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탈불황 시대의 이직 러시 및 기술력 확보

경제위기 동안 실업이나 감원이 노동 뉴스의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면, 탈불황 시대의 이슈는 노동력, 기술력 확보가 될 전망이다. 대다수 전문가나 현장의 기업가들은 탈불황 시대에 국가 경제회복과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은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불황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근로자 유지 및 기술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동안 노동시장 이슈가 될 전망이다. 탈불황 시대의 노동력, 기술력 확보의 어려움은 기업들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적지 않다. 정리해고가 절정일 무렵 CIPD는 정리해고의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고 비용을 교육훈련에 투자해 피고용인들의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애사심과 충성도를 고취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불황 기간 중 정리해고나 임금 삭감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거나, 충성도가 약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CIPD의 분기 보고서인 '피고용인 전망 (Employee Outlook)'에 따르면, 직업 만족도 지수가 2009년 2분기의 48에서 6개월 만에 35로 떨어져,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현 직장에 만족하는 근로자와 불만족스러운 근로자의 비율차로 계산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수의 하락은 전 직종 및 산업 분야 구별없이 감지되고 있다. 직장 만족도의 하락은 이직 결심과도 연결된다. 경기가 풀릴 경우, 회사에 대한 반감이나, 임금수준 회복, 고용안정을 위해,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회계감

사기업인 Pw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3%의 영국 근로자들이 경제위기 동안 고용주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꼈으며, 가능하다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답자의 23%는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음에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에도 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CIPD의 설문에서 34%의 근로자들이 이직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고용불안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직 희망 분야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 부문에 몰려 있다. 사설 인력개발회사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슷하게 나왔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불황의 여파로 본인들이 다니는 직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으며, 4분의 1은 경제가 나아질 경우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황을 맞아 이직을 고려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로는 고용안정이 꼽혔다.

이직 러시로 인한 인력확보 문제와 더불어 교육훈련투자에 대한 부실 때문에 생기는 기술력의 공백도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영국이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기술력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불황을 맞이하면서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교육훈련 투자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제조업 고용주협회(EEF)는 작년 4월에 실시한 설문에서 회원사 중 55%가 경기회복 후를 대비한 기술인력을 유지,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 지급 및 실업자 구제라는 발등의 불 때문에 여력이 없어진 정부가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우려였다. 영국화물운송협회(UK FTA)도 전통적으로 40대 이상인 운송 근로자들이 불황을 거치면서 상당수 해고되었고, 국가직능자격증(NVQ) 과정에서 운송 분야가 제외되어, 차세대 근로자들을 육성할 수 있는 원천을 잃어버렸으며, 운송업 근로자들의 세대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구인산업연합회(REC)의 그린 회장은 불황이 잠깐이나마 노동수요를 낮춰 기술력 부족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줄인 측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저해해 영국의 고질적인 기술력 부족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 ■ 맺음말

영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오랜 만에 봄바람이 불어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

이긴 하지만, 고용과 경기가 모두 성장세로 돌아서며, 공식적으로 불황 탈출을 선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경제회복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가시적인 불안 요소들이 도처에 포진해 있어 더블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정부 부채가 도사리고 있어, 민간 부문에서 살아나고 있는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일부 EU 회원국들의 불안한 재정상태가 영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더군다나 6월 예정된 총선으로 인해 경제회복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정부의 위치마저 불안한 상태이다. 영국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KLI**

---

#### 참고자료

---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9), Building Britain's recovery: Achieving full employment.
- CIPD (2009), Jobs: The impact of recession and prospects for recovery.
- CIPD (2010), Employee Outlook: Emerging from the downturn?
- BBC, 2009년 10월 23일, 'Where the recession has hit hardest'
- Personneltoday.com, 2010년 1월 5일, 'One in three workers 'ready for change''
- BBC, 2010년 1월 12일, 'UK 'close to leaving recession''
- BBC, 2010년 1월 20일, 'Unemployment falls to 2.46m'
- BBC, 2010년 1월 25일, 'Recession has 'deep impact' on jobs'
- Personneltoday.com, 2010년 1월 26일, 'Recession 'over' but employee engagement hits all-time low, CIPD'